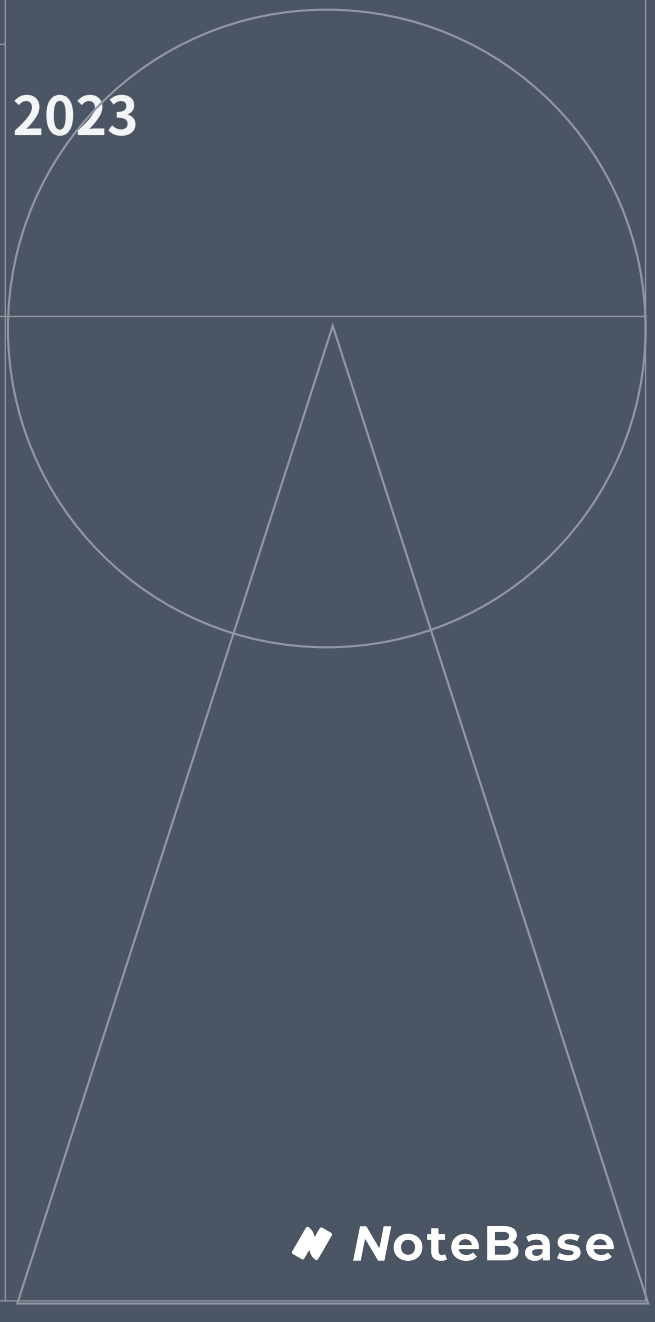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3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3

1. 다음은 갑과 을이 각각 진행한 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 경험'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 OO군의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2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만나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학 중인 자녀들은 어머니가 한국어 소통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어머니로부터 학습에 도움을 받기 어려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 을은 '해외여행 경험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중 1,000명의 조사대상자를 무작위로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해외여행 경험은 여행한 나라의 수와 여행 기간으로 파악하였다. 조사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해외여행 경험이 많을수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① 갑은 질적 연구를, 을은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② 갑의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③ 을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이다.

④ 갑의 연구에서는 인과 법칙 발견과 미래 예측이 목적이다.

⑤ 을의 연구에서 여행한 나라의 수와 여행 기간은 해외여행 경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료 수집 방법과 연구 대상의 규모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구분하고, 모집단·일반화·조작적 정의·연구 목적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질적 연구는 심층 면접이나 참여 관찰 등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연구이다. 소수 사례를 깊이 탐구하므로 일반화가 어렵다.
양적 연구는 설문 조사나 실험 등을 통해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하고 변수 사이의 관계나 일반적 법칙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면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
모집단은 연구 결과를 적용하려는 전체 대상이고, 표본은 모집단에서 실제 조사 대상으로 뽑은 일부이다.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 개념을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 바꾸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갑은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하여 경험의 의미를 탐구했으므로 질적 연구이고, 을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변수를 수치화했으므로 양적 연구이다.
② O — 갑은 특정 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 20명을 심층 면접한 연구이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사 결과를 전체 결혼 이주 여성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③ O — 을은 연구 결과를 적용하려는 모집단을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으로 설정하고, 그중 무작위로 뽑은 1,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하였다.
④ X — 틀린 표현은 '갑의 연구에서는 인과 법칙 발견과 미래 예측이 목적이다'이다. 실제로 갑과 같은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경험과 그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인과 법칙의 발견과 미래 예측은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⑤ O — 을은 추상적인 '해외여행 경험'을 여행한 나라의 수와 여행 기간이라는 측정 가능한 지표로 구체화했으므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갑의 분석 결과에 '한국어 소통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라는 변수 간 관계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갑을 양적 연구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연구 유형은 결과 문장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 자료 수집 방식과 자료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갑은 소수 대상의 심층 면접, 을은 대규모 표본의 설문 조사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심층 면접·소수 사례·의미 해석이 중심이면 질적 연구로 판단하고, 설문 조사·무작위 표집·수치화·일반화가 중심이면 양적 연구로 판단한다. 이어서 모집단은 결과 적용 대상 전체, 표본은 실제 조사 대상 일부,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 지표로 바꾼 것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질적 연구는 깊이와 의미, 양적 연구는 수치와 일반화이다. 모집단은 전체, 표본은 일부,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하게 바꾸는 것이다.

NoteBase

2. 다음은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자연 현상은 ㉠법칙이 작용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법칙이 작용한다. 그리고 자연 현상은 몰가치적인 특징이 있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자연 현상은 ㉢과 ㉣의 원리를 따르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과 ㉤의 원리를 따른다.

	㉠	㉡	㉢	㉣	㉤
①	존재	당위	필연성	확실성	확률
②	존재	당위	필연성	확률	확실성
③	존재	당위	특수성	확률	확실성
④	당위	존재	필연성	확실성	확률
⑤	당위	존재	특수성	확률	확실성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존재 법칙과 당위 법칙, 몰가치성과 가치 함축성, 필연성·확실성과 개연성·확률의 원리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 현상: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존재 법칙이 적용되고 몰가치적이며, 동일한 원인에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사회·문화 현상: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된 현상이다. 당위 법칙이 적용되고 가치 함축적이며,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를 따른다.
따라서 ㉠은 존재, ㉡은 당위, ㉢은 필연성, ㉣은 확실성, ㉤은 확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 존재, ㉡ 당위, ㉢ 필연성, ㉣ 확실성, ㉤ 확률의 대응이 모두 옳다.
② X - ㉣을 확률, ㉤을 확실성으로 바꾼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자연 현상이 확실성의 원리를 따르고 사회·문화 현상이 확률의 원리를 따르므로, ㉣은 확실성이고 ㉤은 확률이다.
③ X - ㉢ 특수성, ㉣ 확률, ㉤ 확실성의 대응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자연 현상이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를 따르고 사회·문화 현상이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를 따르므로, ㉢은 필연성, ㉣은 확실성, ㉤은 확률이다.
④ X - ㉠ 당위와 ㉡ 존재를 서로 바꾼 부분만 틀렸으며, ㉢ 필연성·㉣ 확실성·㉤ 확률의 대응은 옳다. 올바른 전체 대응은 ㉠ 존재, ㉡ 당위, ㉢ 필연성, ㉣ 확실성, ㉤ 확률이다.
⑤ X - ㉠ 당위와 ㉡ 존재가 서로 바뀌었고, ㉢ 특수성·㉣ 확률·㉤ 확실성도 틀렸다. 올바른 전체 대응은 ㉠ 존재, ㉡ 당위, ㉢ 필연성, ㉣ 확실성, ㉤ 확률이다.

오답 포인트

자연 현상의 확실성과 사회·문화 현상의 확률을 뒤바꾸기 쉽다. 또한 제시문의 '개연성'과 짝을 이루는 말은 확률이며, '필연성'과 짝을 이루는 말은 확실성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칙은 자연 현상=존재, 사회·문화 현상=당위로 먼저 구분한다. 그다음 예외 가능성을 기준으로 자연 현상=필연성·확실성, 사회·문화 현상=개연성·확률로 묶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은 존재·필연·확실, 사회·문화는 당위·개연·확률이다.

NoteBase

3. 일탈행동과 범죄를 설명하는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탈행동이나 범죄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 또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른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보이는 소수의 집단 또는 사람들에게 일탈자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생겨난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야만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낙인을 찍게 되면, 이들은 '일탈자'가 되어 일탈자에 걸맞게 행동하게 된다. 결국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는 행위는 일탈행동이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① 일탈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스스로 일탈자라는 의식을 강화하게 된다.

② 특별히 비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도 낙인의 성격에 따라 일탈자가 될 수 있다.

③ 최초의 일탈행동이나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잘 설명해준다.

④ 사회적, 문화적 권력이 어떻게 일탈자와 일탈행동을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준다.

⑤ 한 번 찍힌 낙인은 범죄를 근절하기보다 오히려 더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낙인이론이 일탈의 최초 원인보다 사회적 낙인과 그에 따른 이차적 일탈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낙인이론: 어떤 행동의 속성 자체보다 사회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일탈자로 규정하고 낙인찍는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일차적 일탈은 낙인이 내면화되기 전의 최초 일탈이고, 이차적 일탈은 일탈자라는 낙인을 받아들여 일탈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한 뒤 반복하거나 강화하는 일탈이다.

핵심 구분은 '최초 일탈의 발생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반응과 낙인이 이후 일탈을 어떻게 증폭하는가'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은 그 평가를 내면화하여 자신을 일탈자로 인식하는 자아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② O — 행동 자체가 특별히 비도덕적이지 않더라도 사회의 규범과 낙인 기준에 따라 일탈로 규정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최초의 일탈행동이나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잘 설명해준다'이다. 낙인이론은 최초 일탈의 원인보다는 사회적 낙인이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이차적 일탈이 발생·강화되는 과정을 잘 설명한다.
④ O — 누가 일탈자로 규정되는지는 사회의 규범과 이를 규정·적용하는 집단의 사회적·문화적 권력에 영향을 받으므로, 낙인이 일탈자와 일탈행동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⑤ O — 한 번 부여된 일탈자 낙인은 정상적 역할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일탈적 자아 정체성과 교류를 강화하여 범죄를 줄이기보다 반복·증폭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낙인이론이 일탈을 설명한다는 점을 '최초 일탈의 원인까지 잘 설명한다'로 과장한 선지이다. 낙인이론의 강점은 최초 행동의 원인 규명보다 낙인 이후의 이차적 일탈을 설명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사회적 반응, 낙인, 자아 정체성의 변화, 이차적 일탈, 일탈의 증폭'이 나오면 낙인이론의 설명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낙인이론이 최초 일탈의 발생 원인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하면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낙인이론은 최초 원인보다 낙인 이후의 이차적 일탈을 설명한다.

NoteBase

4. ㉠~㉤은 문화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문화의 속성을 옳게 연결한 것은?

> ㉠ 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행동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
> ㉡ 한 부분의 문화요소가 변동하면 연쇄적 변동이 나타난다.
> ㉢ 문화는 상징체계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승된다.
> ㉣ 문화적 특성은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 획득된다.
>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창조, 변화, 소멸된다.

	㉠	㉡	㉢	㉣	㉤
①	공유성	전체성	축적성	학습성	변동성
②	전체성	축적성	변동성	공유성	학습성
③	축적성	공유성	전체성	변동성	학습성
④	공유성	전체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⑤	학습성	전체성	변동성	축적성	공유성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화의 공유성·전체성·축적성·학습성·변동성을 각 진술의 핵심 표현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유성: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문화를 함께 지니고 그에 따라 공통적으로 행동하는 성질이다.
전체성: 문화의 여러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한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의 연쇄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질이다.
축적성: 문화가 상징체계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승되고, 새로운 내용이 더해져 누적되는 성질이다.
학습성: 문화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와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성질이다.
변동성: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기거나 변화하고 사라지는 성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은 공통 행동이라는 표현에서 공유성, ㄴ은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전체성, ㄷ은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는 점에서 축적성, ㄹ은 후천적 학습이라는 점에서 학습성, ㅁ은 시간에 따른 생성·변화·소멸이라는 점에서 변동성에 해당한다.
② X — ㄱ을 전체성, ㄴ을 축적성, ㄷ을 변동성, ㄹ을 공유성, ㅁ을 학습성으로 연결한 부분이 모두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ㄱ-공유성, ㄴ-전체성, ㄷ-축적성, ㄹ-학습성, ㅁ-변동성이다.
③ X — ㄱ을 축적성, ㄴ을 공유성, ㄷ을 전체성, ㄹ을 변동성으로 연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ㅁ의 학습성 연결도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ㄱ-공유성, ㄴ-전체성, ㄷ-축적성, ㄹ-학습성, ㅁ-변동성이다.
④ X — ㄱ의 공유성, ㄴ의 전체성, ㅁ의 변동성 연결은 맞지만, ㄷ을 학습성으로, ㄹ을 축적성으로 연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ㄷ-축적성, ㄹ-학습성이다.
⑤ X — ㄱ을 학습성, ㄷ을 변동성, ㄹ을 축적성, ㅁ을 공유성으로 연결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며, ㄴ의 전체성만 맞다. 올바르게는 ㄱ-공유성, ㄴ-전체성, ㄷ-축적성, ㄹ-학습성, ㅁ-변동성이다.

오답 포인트

ㄴ의 '연쇄적 변동'을 시간에 따른 변화인 변동성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표현은 문화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체성을 뜻한다. 또한 ㄷ의 '전승'은 단순한 공유가 아니라 세대 간 전달과 누적을 강조하므로 축적성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통 행동은 공유성, 요소 간 연쇄 영향은 전체성, 세대 간 전승과 누적은 축적성, 후천적 습득은 학습성, 생성·변화·소멸은 변동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함께하면 공유성, 얽혀 있으면 전체성, 이어 쌓이면 축적성, 배워 얻으면 학습성, 시간 따라 달라지면 변동성이다.

NoteBase

5. 다음 표는 갑국의 소득 계층별 가구 비율의 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연도 \ 소득 계층	소득 상위층	소득 중위층	소득 하위층
2000년	18 %	73 %	9 %
2010년	21 %	68 %	11 %
2020년	22 %	63 %	15 %

<보기>

ㄱ. 갑국은 개방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ㄴ. 갑국에서 수평 이동의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ㄷ. 갑국은 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ㄹ. 갑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도별 소득 계층의 구성비 변화에서 계층 구조의 형태와 사회적 대응 필요성을 읽고,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은 구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연도의 상위층·중위층·하위층 비율을 확인한다.
2.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해 각 계층의 증감 방향을 확인한다.
3. 계층 구성비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과 수평 이동처럼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한다.

핵심 근거

중위층은 2000년 73%에서 2020년 63%로 줄었지만 모든 연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유지된다. 다이아몬드형은 중위층의 비중이 큰 개방적 계층 구조를 나타낸다. 하위층은 9%에서 11%, 15%로 계속 증가하므로 빈곤층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표에는 직업·지역 등 동일 계층 내 수평 이동에 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다. 표에는 상위층·중위층·하위층의 비율만 있고 직업이나 지역의 변화 같은 수평 이동 자료가 없으므로 수평 이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 틀린 조합 'ㄱ, ㄴ'은 'ㄱ,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ㄱ과 ㄷ이 모두 옳다. 중위층이 모든 연도에 63% 이상으로 가장 커 다이아몬드형의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나며, 하위층은 9%에서 15%로 증가해 사회 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ㄴ은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 계층별 구성비 변화는 수직적 계층 구조와 관련되며, 동일 계층 내 수평 이동 가능성의 증감을 보여 주지 않는다. 틀린 조합 'ㄴ, ㄷ'은 'ㄱ,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ㄴ과 ㄹ이 모두 옳지 않다. 수평 이동 자료가 없고, 2020년에도 중위층 63%가 상위층 22%와 하위층 15%보다 훨씬 크므로 피라미드형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틀린 조합 'ㄴ, ㄹ'은 'ㄱ,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ㄷ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하위층이 증가했더라도 2020년의 중위층 비율이 63%로 가장 크므로 계층 구조는 여전히 다이아몬드형이다. 틀린 조합 'ㄷ, ㄹ'은 'ㄱ, ㄷ'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하위층 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만 보고 곧바로 피라미드형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기 쉽다. 계층 구조의 형태는 어느 계층의 비중이 가장 큰지를 함께 보아야 하며, 2020년에도 중위층이 63%로 압도적으로 크다. 또한 계층별 구성비 자료를 수평 이동 자료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계층의 비중과 증감 방향을 확인한다. 중위층 비중이 가장 크면 다이아몬드형, 하위층 비중이 가장 크면 피라미드형으로 판단한다. 이어서 계층 구성비만으로 알 수 없는 이동 가능성이나 절대 가구 수를 추론한 보기는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중위층 중심은 다이아몬드형, 하위층 증가는 안전망 확대 필요, 계층 비율만으로 수평 이동은 판단할 수 없다.

NoteBase

6. 다음은 지구생태위기에 대응하여 제시된 하나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은?

> 1992년 리우환경회의의 중심 주제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이자 '미래 세대의 요구 충족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지구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는 한도 내에서 발전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① 정의로운 전환
② 그린 뉴딜
③ 생태적 현대화
④ 지속 가능한 발전
⑤ 재생에너지 1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고, 지구의 수용 능력 안에서 발전을 추구한다는 설명에 해당하는 환경 용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되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발전이다.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과 환경·경제·사회의 조화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저탄소 사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과 피해가 노동자·지역·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기후·환경 문제 대응과 경기 활성화·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정책 구상이다.
생태적 현대화는 기술 혁신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재생에너지 100은 기업 등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목표 또는 캠페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정의로운 전환'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는 발전의 정의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의 부담과 혜택을 노동자·지역·취약계층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뜻한다.
② X — '그린 뉴딜'은 제시된 세대 간 발전 원칙의 명칭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환경·기후 대응을 투자, 산업 전환, 일자리 창출과 결합한 정책 구상이다.
③ X — '생태적 현대화'는 제시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기술 혁신과 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을 양립시킬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④ O — '미래 세대의 요구 충족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발전'과 '지구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는 한도 내의 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의미이다.
⑤ X — '재생에너지 100'은 발전 전반의 세대 간 형평성을 뜻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기업 등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뜻한다.

오답 포인트

다섯 용어가 모두 환경 위기 대응과 관련되어 있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의 '미래 세대', '현재 세대', '지구의 수용 능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바로 가리키는 결정적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 '세대 간 형평성', '환경의 수용 능력'이 함께 제시되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판단한다. 전환 과정의 공정성은 정의로운 전환, 녹색 투자와 일자리의 결합은 그린 뉴딜, 기술·제도를 통한 성장과 환경의 양립은 생태적 현대화, 전력의 전면적 재생에너지 조달은 재생에너지 100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재의 필요 충족 + 미래 세대의 가능성 보전 + 지구 수용 능력 고려'이다.

NoteBase

7.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중앙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서 작동한다.
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ㄷ.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
ㄹ. 특정 산업 분야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계획경제체제에서 경제 문제를 결정하는 주체와 이 체제의 목표·특징·한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계획경제체제는 중앙정부가 생산과 분배 등 주요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의 가격 기능보다 국가의 계획을 중시하며, 분배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특정 산업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이 제약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 및 시장 가격을 통해 자원이 배분되는 경제체제이며, 효율성을 중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ㄷ은 옳지만, 특정 산업 분야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ㄹ도 옳으므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조합 'ㄱ, ㄷ'은 'ㄱ,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② X
ㄷ은 옳지만 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가 틀리다. 계획경제체제는 효율성보다 분배의 형평성을 중시하며, 옳은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③ X
ㄷ과 ㄹ은 옳지만, 중앙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작동한다는 ㄱ이 빠졌다. 틀린 조합 'ㄷ, ㄹ'은 'ㄱ,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④ X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ㄷ이 빠졌다. 'ㄴ'은 '계획경제체제는 분배의 형평성을 중시한다'로 고쳐야 하며, 옳은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⑤ O
ㄱ은 중앙정부가 경제활동을 계획·통제한다는 특징, ㄷ은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한계, ㄹ은 국가가 자원을 동원해 특정 산업을 단기간에 집중 육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므로 모두 옳다.

오답 포인트

ㄴ의 '효율성'이 핵심 함정이다. 계획경제체제는 국가 계획에 따른 형평성 있는 분배를 중시하고, 시장경제체제는 시장 가격에 따른 효율적 자원 배분을 중시한다. 또한 ㄹ의 집중 육성 능력은 계획경제의 장점이므로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앙정부의 계획·통제', '분배의 형평성', '특정 산업의 집중 육성'은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으로 판단한다. '효율적 자원 배분'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시장경제체제와 연결하고, 계획경제체제의 한계로는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의 제약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계획경제는 정부 계획·형평성·집중 육성, 시장경제는 시장 가격·자유·효율성이다.

NoteBase

8. 공공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누구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다.

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생산에 참여하고자 한다.

ㄷ. 대가를 지불하는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ㄹ.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제약하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공재의 핵심 특성인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구별하고, 각 진술이 어느 특성을 설명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렵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비배제성: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기 어려운 성질이다. 무임승차 문제가 생겨 민간의 생산 유인이 부족해질 수 있다.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약하거나 감소시키지 않는 성질이다.

ㄱ은 비배제성을, ㄹ은 비경합성을 설명하므로 옳다. ㄴ과 ㄷ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수요가 많더라도 대가를 내지 않고 이용하려는 무임승차가 발생하므로 누구나 생산에 참여하려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② X —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ㄹ이 빠져 있다. 공공재는 원칙적으로 대가 지불 여부에 따라 이용자를 배제하거나 서비스를 차별하기 어렵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③ O — 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는 비배제성을, ㄹ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는 비경합성을 정확히 설명한다.
④ X — ㄴ과 ㄷ은 모두 틀리다. 무임승차 때문에 민간의 생산 유인이 부족할 수 있으며, 대가 지불 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해 제공하기도 어렵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⑤ X — ㄴ과 ㄷ은 모두 틀리고 옳은 ㄱ과 ㄹ이 빠져 있다. 공공재의 핵심 특성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오답 포인트

ㄴ의 ‘수요가 많다’와 ‘누구나 생산에 참여한다’를 바로 연결하는 것이 함정이다. 공공재는 수요가 있어도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ㄷ의 차별 제공은 비배제성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이용 가능’이면 비배제성, ‘내가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지 않음’이면 비경합성으로 판단한다. 생산 유인이 부족하거나 무임승차가 언급되면 비배제성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배제하기 어렵고, 함께 소비해도 서로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

NoteBase

9. 다음 (가)~(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1776년 애덤 스미스는『국부론』을 출판하여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는 개인의 합리적 행동은 사회의 부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며 시장경제에서 적극적인 경쟁을 옹호하였다.

(나) 1929년 소비가 둔화하고 상품의 재고가 증가하여 기업들은 구조 조정을 시작했다. 소득이 줄어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자 경기는 침체하였고 주식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다) 1980년대부터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강화하였고 세계화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① (가)는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을 심화시켰다.
② (나)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발생시켰다.
③ (나)는 유효 수요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발생하였다.
④ (다)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⑤ (다)는 각국 정부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촉진시켰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유방임주의, 대공황,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 경제 정책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유방임주의: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시장 경쟁을 중시하고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대표적인 키워드이다.
대공황: 1929년을 전후해 소비와 투자가 급감하고 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고용·소득이 연쇄적으로 위축된 심각한 경기 침체이다. 유효 수요 부족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핵심이다.
신자유주의: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며 규제 완화, 민영화, 감세, 복지 축소 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본격화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시장 경쟁을 강조하였다. 틀린 표현은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을 심화시켰다'이며, 올바르게는 중상주의적 국가 개입을 비판하고 자유방임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② X — (나)의 대공황기에는 소비 감소, 재고 증가, 소득과 물가의 하락이 나타났으므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졌다. 틀린 표현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며, 올바르게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현상이 확산되었다.
③ X — (나)는 소비자의 구매력 하락으로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인 상황이므로 유효 수요가 부족하였다. 틀린 표현은 '유효 수요가 지나치게 확대'이며, 올바르게는 유효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다.
④ O — (다)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의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기존 정부 개입 정책이 한계를 보이자 부상하였다. 이후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가 시장 중심 정책을 강화하였다.
⑤ X — (다)의 신자유주의는 정부 역할의 축소,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하므로 대규모 공공사업 확대와는 방향이 다르다. 틀린 표현은 '각국 정부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촉진시켰다'이며, 올바르게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경쟁과 시장 기능을 강화하였다.

오답 포인트

1929년 대공황의 '재고 증가'를 수요 확대의 결과로 해석하면 ③을 고르기 쉽다. 재고 증가는 상품이 충분히 팔리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수요 과잉이 아니라 유효 수요 부족의 신호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등장했지만, 그 처방은 공공사업 확대보다 시장 경쟁 강화와 정부 개입 축소에 가깝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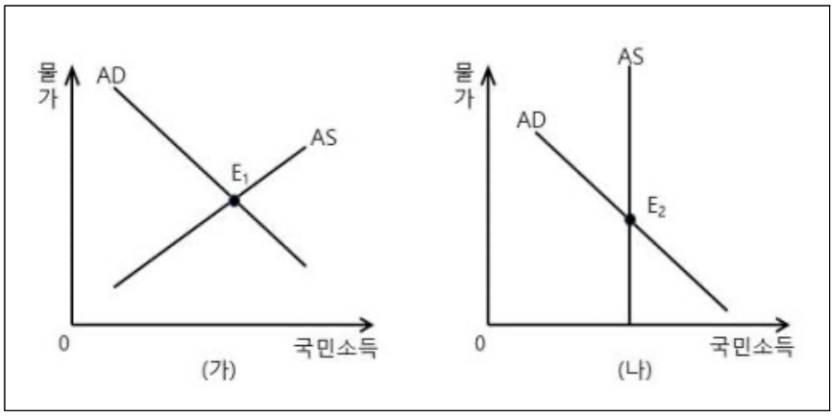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손·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 '1929년·소비 감소·재고 증가·주가 폭락'은 대공황과 유효 수요 부족, '1980년대·미국과 영국·시장 효율과 경쟁'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의 신자유주의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 대공황은 수요 부족, 1980년대 신자유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 대응과 시장 경쟁 강화이다.

NoteBase

10. 그림 (가)와 (나)는 2개의 다른 모형으로 총수요 곡선(AD)과 총공급 곡선(AS)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현재 경제는 각각 균형점 E_1과 E_2에 있다고 가정한다)



① (가)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총수요 곡선(AD)이 좌측으로 이동하지만 구축효과가 발생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② (가)에서 노동자의 명목임금이 상승하면 총공급 곡선(AS)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③ (나)에서 화폐공급량을 늘리는 통화정책을 전개하여도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다.

④ (나)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전개하면 총공급 곡선(AS)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물가는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⑤ (가)와 (나)는 각각 총수요 곡선(AD)과 총공급 곡선(AS)이 교차하는 E_1과 E_2점에서 완전고용이 실현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과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수직인 총공급 곡선을 구분하고, 재정·통화정책이 총수요와 물가·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총수요 변화가 물가와 국민소득을 함께 바꾸지만, (나)에서는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수준에 고정되어 총수요 변화가 물가만 바꾼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늘리므로 총수요 곡선 *AD*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의 총수요 확대 효과를 일부 줄일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AD*가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정부지출 증가로 *AD*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이 모두 증가한다.
② X — 명목임금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를 높여 총공급을 감소시키므로 총공급 곡선 *AS*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올바르게는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③ O — (나)의 *AS*는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수직이다. 화폐공급 증가로 *AD*가 우측으로 이동해도 생산량은 더 늘지 못하므로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고 물가만 상승한다.
④ X — 정부지출 증가는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요를 증가시키므로 *AD*를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올바르게는 (나)에서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고 물가가 상승한다.
⑤ X — (나)의 균형점 E_2는 수직 *AS*가 나타내는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 있지만, (가)의 균형점 E_1이 반드시 완전고용을 뜻하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나)에서는 완전고용이 실현되지만 (가)에서는 완전고용 여부를 도식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①·④는 정부지출 증가가 이동시키는 곡선을 *AD*가 아닌 다른 방향이나 *AS*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③에서는 수직 *AS*일 때 총수요 확대가 국민소득이 아니라 물가에만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정책이 *AD*와 *AS* 중 어느 곡선을 이동시키는지 판단한다. 정부지출·화폐공급 증가는 *AD*를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명목임금 상승은 생산비 증가를 통해 *AS*를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다음 *AS*가 우상향인지 수직인지에 따라 국민소득의 변화 여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우상향 *AS*: 총수요 증가 시 물가·국민소득 증가. 수직 *AS*: 총수요 증가 시 물가만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NoteBase

11. 다음 자료의 A~C 시기 환율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환율 외에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시기 / 환율	A	B	C
원/달러	1,023	1,127	1,021
원/100엔	923	891	932

<보기>

ㄱ. A 시기에서 B 시기로 가며 원화의 가치는 달러에 대해 상승했다.

ㄴ. A 시기에 달러를 매입한 한국인은 매입한 달러를 B 시기보다 C 시기에 원화로 환전하면 이익이 된다.

ㄷ.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실적은 A 시기에서 B 시기로 가며 악화되지만 B 시기에서 C 시기로 가며 개선될 것이다.

ㄹ.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A 시기에 달러와 엔화를 미리 매입한 한국인은 B 시기에는 미국을, C 시기에는 일본을 가는 것이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원/달러 환율과 원/100엔 환율의 변화를 보고 원화 가치, 환전 손익, 수출 여건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원화로 표시한 외화 가격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내리면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자료 읽는 순서

1. 비교 대상 통화를 구분한다. 미국 관련 판단에는 원/달러 환율을, 일본 관련 판단에는 원/100엔 환율을 사용한다.
2. 외화 1단위 또는 100엔을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한다.
3. 미리 산 외화의 환전 손익과 수출 가격 경쟁력에 연결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원/달러 환율은 A의 1,023원에서 B의 1,127원으로 상승하므로 A에서 B로 갈 때 원화 가치는 달러에 대해 하락한다. C의 원/달러 환율은 1,021원으로 A의 1,023원보다 낮으므로 A에 산 달러를 C에 원화로 바꾸면 손실이 발생한다. 원/100엔 환율은 A의 923원에서 B의 891원으로 하락한 뒤 C의 932원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대일 수출 여건은 A에서 B로 갈 때 악화되고 B에서 C로 갈 때 개선된다. 또한 A에 미리 산 달러는 B의 미국 여행에, A에 미리 산 엔화는 C의 일본 여행에 각각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이 모두 틀리다. ㄱ의 '원화의 가치가 달러에 대해 상승했다'는 표현은 잘못이며, 원/달러 환율이 1,023원에서 1,127원으로 상승했으므로 원화 가치는 달러에 대해 하락했다고 고쳐야 한다. ㄴ도 A의 1,023원에 산 달러를 C의 1,021원에 원화로 환전하므로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다고 고쳐야 한다.
② X — ㄷ은 옳지만 ㄱ이 틀리다. ㄱ은 A에서 B로 갈 때 원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 상승한 것이 아니라 하락했다고 고쳐야 한다. 옳은 조합은 ㄷ, ㄹ이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다. ㄴ은 A에 산 달러를 C에 원화로 환전하면 이익이 아니라 달러당 2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고쳐야 한다. 옳은 조합은 ㄷ, ㄹ이다.
④ X — ㄹ은 옳지만 ㄴ이 틀리다. ㄴ의 '이익이 된다'는 표현은 '손실이 발생한다'로 고쳐야 한다. 옳은 조합은 ㄷ, ㄹ이다.
⑤ O — ㄷ과 ㄹ이 모두 옳다. ㄷ은 원/100엔 환율이 923원에서 891원으로 하락했다가 932원으로 상승한 변화와 일치한다. ㄹ은 A에 산 달러의 가격이 B에 더 높고, A에 산 엔화의 가격이 C에 더 높으므로 두 여행 모두 외화를 미리 산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환율 상승을 원화 가치 상승으로 거꾸로 해석하거나, 대일 수출을 판단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보는 것이 함정이다. '원/외화' 환율 상승은 외화 가치 상승이자 원화 가치 하락이며, 교역 상대국에 맞는 환율을 사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외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약세, 하락하면 원화 강세로 판단한다. 외화를 미리 산 경우에는 매입 시점보다 사용·환전 시점의 환율이 높으면 유리하고 낮으면 불리하다. 수출은 상대국 통화에 대해 원화가 약세이면 유리하고 강세이면 불리하다.

암기 포인트

원/외화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이며, 수출 판단은 교역 상대국의 통화 환율로 한다.

NoteBase

12. 국내총생산(GD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경제주체들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②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감률로 계산한다.

③ 한 나라의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한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면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다.

⑤ 국내에서 외국인에 의해 생산된 부가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의 국내성·생산성 개념과 실질 GDP, 1인당 GDP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이다. 생산 주체의 국적이 아니라 생산 장소가 기준이므로, 내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제외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한다. 경제성장률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GDP의 증가율로 파악하며, 1인당 GDP는 GDP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집계하며, 생산 단계별 부가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O — 경제성장률은 물가 변동을 제거하여 생산량의 실질적 변화를 보여 주는 실질 GDP의 증가율로 계산한다.
③ O —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생산 장소가 국외이므로 그 나라의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국민총소득(GNI)을 계산할 때 반영된다.
④ O — GDP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DP는 국민 한 사람당 평균적인 생산·소득 수준을 나타내므로 평균적인 물질적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국내에서 외국인에 의해 생산된 부가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이다. GDP는 생산자의 국적이 아니라 생산 장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도 국내 GDP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⑤는 '외국인'이라는 생산 주체의 국적에 주목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GDP의 D는 국내를 뜻하므로 누가 생산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생산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③의 국외 소득은 GDP가 아니라 국민 기준 지표인 GNI와 연결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DP 포함 여부는 먼저 생산 장소가 국내인지 확인한다. 국내 생산이면 외국인이 생산해도 포함하고, 국외 생산이면 자국민이 생산해도 제외한다. 성장률은 실질 GDP, 평균 생활 수준은 1인당 GDP와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GDP는 '누가'가 아니라 '어디서' 생산했는지가 기준이다. 국내 외국인 생산은 포함, 국외 자국민 생산은 제외이다.

NoteBase

13. 법치주의의 유형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A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국가의 권력이 행사되기만 하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의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도 그 법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역사적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대 사회로 오면서 법의 절차적 요건과 함께 법의 내용과 목적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B가 등장하였다.

<보기>

ㄱ. A는 B와 달리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ㄴ. B는 A와 달리 법을 권력의 획득 및 행사, 유지를 위한 도구로만 본다.

ㄷ. B는 A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과 법의 내용 모두를 중요시한다.

ㄹ. A는 B와 달리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법의 제정 절차와 내용·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기준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형식적 법치주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이 행사되면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법의 내용과 목적의 정당성은 따지지 않으며,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 가깝다.
B(실질적 법치주의): 법률의 형식과 절차뿐 아니라 그 내용과 목적도 헌법의 기본 이념과 기본권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지향한다.
따라서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다. A는 법의 내용적 정당성을 묻지 않아 법이 통치권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반면 권력의 획득·행사·유지를 위한 도구로만 법을 보는 위험은 B가 아니라 A에서 나타난다. 올바르게는 'A는 B와 달리 법이 권력 유지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이다.
② O — ㄱ과 ㄷ이 모두 옳다. A는 합법의 형식만 갖춘 부당한 통치를 막기 어렵지만, B는 통치의 합법성과 법 내용의 정당성을 함께 중시한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다. B는 법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만 보지 않고 헌법 이념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범으로 본다. 올바르게는 'B는 법의 형식과 함께 내용·목적의 정당성도 중시한다'이다.
④ X — ㄴ과 ㄹ이 모두 옳지 않다. 권력 유지의 도구로 법을 이용할 위험은 A에 해당하며, A는 법의 내용까지 권력을 구속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통치가 법의 형식을 갖추는 '법에 의한 지배'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B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지향한다'이다.
⑤ X — ㄷ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B가 통치의 합법성과 법 내용의 정당성을 모두 중시하고 법의 지배를 지향한다. 올바르게는 'A는 법에 의한 지배, B는 법의 지배를 뜻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ㄴ과 ㄹ은 A와 B의 특징을 서로 뒤바꾼 진술이다. 특히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표현만 보고 A를 곧바로 법의 지배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A는 법의 형식만 중시하므로 권력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고, B는 법의 내용까지 헌법 이념에 맞아야 한다고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의 제정 절차와 권력 행사의 합법성만 강조하면 형식적 법치주의(A), 여기에 법의 내용·목적의 정당성과 기본권 보장까지 요구하면 실질적 법치주의(B)로 판단한다. '법에 의한 지배'는 A, '법의 지배'는 B에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A는 형식·법에 의한 지배, B는 형식과 내용·법의 지배이다.

NoteBase

14. 다음 (가)~(다)를 주장한 근대 정치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나) 자연상태는 평화롭지만, 개인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다.

(다) 자연상태는 평화로운 상태지만,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불평등 관계에 놓일 수 있다.

① (가)는 사회구성원이 자연권 일부를 통치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나)는 인간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다)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보았다.

④ (가)와 (나)는 시민에게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나)와 (다)는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자연 상태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가) 홉스, (나) 로크, (다) 루소를 구별하고, 이들이 사회 계약과 주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홉스: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고,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강력한 주권자에게 자연권을 전면적으로 양도하는 사회 계약을 주장한다.
(나) 로크: 자연 상태는 대체로 평화롭지만 자연권을 공정하게 보장할 공통의 재판관과 집행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자연권 보호를 위해 권한의 일부를 정부에 맡긴다고 본다. 정부가 신탁을 어기면 국민은 저항할 수 있다.
(다) 루소: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롭고 선량하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으로 불평등이 생겼다고 보고, 사회 계약을 통해 형성된 일반 의지에 주권이 있다고 본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홉스이다. 틀린 표현은 '자연권 일부를 통치자에게 양도'이다. 홉스는 사회 구성원이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자신의 자연권을 주권자에게 전면적으로 양도한다고 보았다.
② X — (나)는 로크이다. 틀린 표현은 '인간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할 수 없다'이다. 로크는 생명·자유·재산이라는 자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삼되, 자연법을 집행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권한 등 일부 권한을 공동체와 정부에 맡긴다고 보았다. 루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X — (다)는 루소이다. 틀린 표현은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부분이다.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자기 보존의 욕구와 연민을 지닌 자유롭고 선량한 존재로 보았으며, 사유 재산과 사회 제도의 발달이 불평등을 낳았다고 보았다.
④ X — (가) 홉스와 (나) 로크가 모두 시민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홉스는 안전과 질서를 위한 강력한 주권을 강조했고, 로크는 국가권력의 제한과 개인의 자연권 보호를 강조했다. 따라서 두 사상가의 공통 주장으로는 '적극적 자유 보장'이 아니라 사회 계약을 통한 국가 성립을 제시해야 한다.
⑤ O — (나) 로크는 정부 권력이 국민의 신탁에서 나오며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 루소는 일반 의지의 주체인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두 사상가 모두 주권의 궁극적 근거를 국민에게 둔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세 사상가의 자연 상태뿐 아니라 권리의 이전 범위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①의 '일부'는 로크의 특징을 홉스에게 붙인 것이고, ②의 '양도할 수 없다'는 루소의 특징을 로크에게 붙인 것이다. 또한 ③은 루소의 성선적 인간관을 반대로 제시하고, ④는 국가 성립의 공통점을 '적극적 자유'로 바꾸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만인의 투쟁'이면 홉스, '평화롭지만 권리 보장이 불안정'하면 로크, '자연인은 평화롭지만 재산 때문에 불평등'이면 루소로 연결한다. 이어 권한 이전은 홉스의 전면 양도, 로크의 일부 위임, 루소의 주권 양도 불가로 구별하고, 국민 주권은 로크와 루소의 공통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홉스는 투쟁·전면 양도, 로크는 불안정·일부 위임·저항권, 루소는 재산 불평등·일반 의지·국민 주권이다.

NoteBase

15. 다음 국회 공고문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공고 제20××-×호
>
> 제○○○회 국회(임시회) 집회공고
>
> ㉠국회의원 A 외 ○○○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회 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 - ㉢일시: 20××년 ×월 ××일(×요일) 오후 ×시
> - 장소: 국회의사당
>
> 20××년 ×월 ××일
>
> ㉣국회의장 ○○○

① ㉠의 국회의원 숫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을 요구할 수 없다.

③ 회기는 ㉢ 날짜 이후 100일 이내이다.

④ ㉡은 매년 9월 1일이며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미뤄진다.

⑤ ㉣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국회의 임시회 집회 요구권자와 요구 정족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 정기회의 집회일,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제한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정기회와 임시회의 규정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집회 =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시점에 모여 국회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회기 = 국회가 집회한 때부터 폐회할 때까지 활동하는 기간이다.
당적 =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된 신분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대한민국헌법 제47조에 따르면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되며,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법 제4조에 따르면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집회한다.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원칙적으로 당선 다음 날부터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수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틀린 표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올바른 표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다.

② X
- 대통령도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틀린 표현: '대통령은 임시회를 요구할 수 없다'
- 올바른 표현: '대통령은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이다.

③ X
- 100일은 정기회의 회기 상한이고, 공고문 속 회의는 임시회이므로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틀린 표현: '회기는 집회 날짜 이후 100일 이내이다'
- 올바른 표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④ X
-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집회하는 것은 정기회이다. 공고문 속 임시회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 틀린 표현: '임시회는 매년 9월 1일이며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미뤄진다'
- 올바른 표현: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며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이다.

⑤ O
-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선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총선의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받으려는 경우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는 예외가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3분의 1과 헌법상 임시회 요구 정족수인 4분의 1을 혼동하거나, ③의 정기회 회기 100일과 임시회 회기 30일을 바꾸어 기억하기 쉽다. 또한 ④의 9월 1일 규정은 임시회가 아니라 정기회에 적용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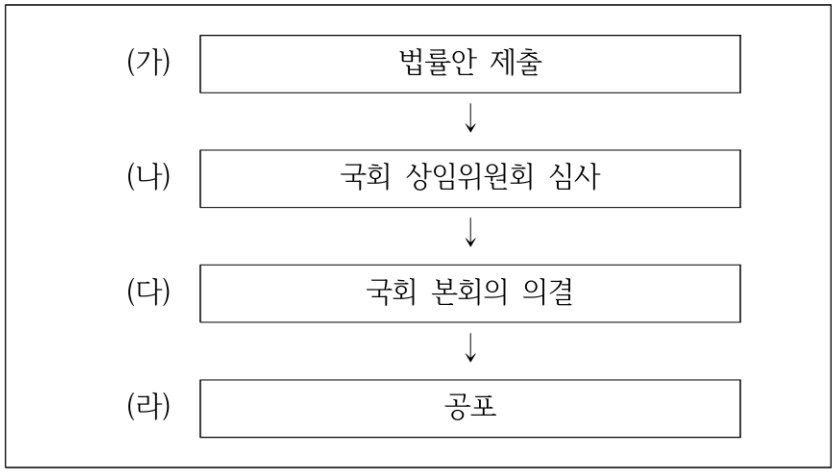
공고문의 '임시회'를 먼저 확인한 뒤 집회 요구권자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회기 상한은 30일로 연결한다. 9월 1일과 100일은 정기회의 규정으로 구별하고, 국회의장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4분의 1, 30일', 정기회는 '9월 1일, 100일', 국회의장은 '원칙적 무당적'이다.

NoteBase

16. 다음은 우리나라의 법률 제·개정 절차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단계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다.

② (가)단계는 발의자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나)단계에서도 법률안이 폐기될 수 있다.

④ (다)단계에서 법률안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회기계속 원칙에 따라 법률안은 폐기되지 않는다.

⑤ (라)단계에서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법률안의 제출·심사·의결·공포 절차에서 각 단계의 주체, 요건, 폐기 사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회기계속의 원칙 =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한 회기 안에 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되지 않는 원칙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된다.

NoteBase

핵심 구분

법률안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제출할 수 있다.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려면 발의자를 포함한 의원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일정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으면 폐기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기간에 공포도 재의 요구도 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확정된다.

올바른 순서

1. 법률안 제출 —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다.
2. 상임위원회 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3. 본회의 의결 —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가 법률안을 의결한다.
4. 공포 —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친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본회의 심의 여부를 가르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 절차에 들어간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 대상이 되므로 이 순서가 성립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헌법상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입법부의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X
- 국회법상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려면 발의자를 포함한 의원 10명 이상이 필요하므로 5명은 부족하다.
- 틀린 표현: 국회의원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올바른 표현: 발의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③ O
-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정 기간 안에 의원 30명 이상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되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도 법률안이 폐기될 수 있다.

④ X
-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안이 폐기되지는 않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예외적으로 폐기된다.
- 틀린 표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법률안은 폐기되지 않는다.
- 올바른 표현: 회기 종료만으로는 폐기되지 않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된다.

⑤ X
- 대통령이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도 재의 요구도 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후 대통령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틀린 표현: 법률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 올바른 표현: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회기 만료와 의원 임기 만료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회기가 끝나도 의안은 계속되지만 의원 임기가 끝나면 폐기된다. 또한 ⑤에서는 대통령의 부작위를 폐기 사유로 오해하기 쉽지만, 공포도 재의 요구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률로 확정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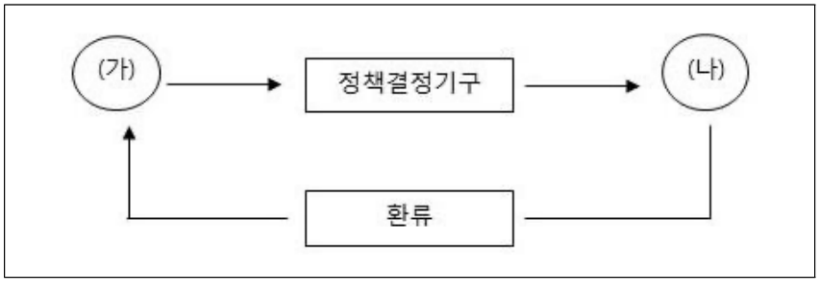
입법 절차 문제는 제출 주체 → 발의 인원 → 위원회 폐기 가능성 → 회기·임기 구별 → 대통령의 공포·재의 요구 순서로 판단한다. 특히 '회기 종료는 계속, 의원 임기 만료는 폐기'와 '대통령의 15일 내 부작위는 법률 확정'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제출은 의원·정부, 의원 발의는 10명, 회기는 계속·임기는 폐기, 대통령의 15일 부작위는 확정이다.

NoteBase

17. 다음은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정치 집단만이 참여할 수 있다.
② (나)는 주로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 (가)와 (나)는 이익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환류 단계에서 정책 결정자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
⑤ 민주적 국가에서는 (가)보다 (나)를 중요시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책 결정 과정의 도식에서 (가)는 투입, (나)는 산출이며, 환류는 산출의 결과가 다시 투입에 영향을 주는 과정임을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투입(가) — 국민과 여러 집단의 요구와 지지가 정치 체계에 들어온다.
2. 정책 결정 — 정책 결정 기구가 요구를 검토하고 대안을 선택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3. 산출(나) — 결정된 정책이 주로 행정부를 통해 집행된다.
4. 환류 — 정책의 집행 결과와 사회의 반응이 다시 새로운 요구와 지지에 영향을 준다.

왜 이 순서: 투입된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의 자료가 되고, 결정된 정책이 집행되어야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반응이 환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투입 단계로, 정치 집단만이 아니라 개인,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정치 집단만이 참여할 수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참여할 수 있다'이다.
② O — (나)는 산출 단계이다. 정책 결정 기구에서 결정된 정책은 주로 행정부의 구체적인 집행을 통해 사회에 산출된다.
③ X — 이익 집단은 주로 (가)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투입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나)의 정책 산출을 담당하는 중심 주체는 정책 결정 기구와 행정부이다. 틀린 표현은 '(가)와 (나)에서 이익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이익 집단은 주로 (가)의 투입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다.
④ X —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환류 단계가 아니라 정책 결정 기구의 정책 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환류 단계에서는 정책의 결과와 사회의 반응이 다시 투입 과정에 전달된다. 틀린 표현은 '환류 단계에서 … 선택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정책 결정 단계에서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이다.
⑤ X — 민주 국가는 정책의 산출만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와 지지가 반영되는 투입(가)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투입 과정이 중시된다. 틀린 표현은 '(가)보다 (나)를 중요시한다'이며, 올바르게는 '민주 국가는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를 중요시하며 투입과 산출의 민주성을 함께 추구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처럼 환류를 정책 대안의 선택 단계로 오해하기 쉽다. 대안 선택은 정책 결정 과정에 속하고, 환류는 이미 산출된 정책의 결과와 반응이 다시 투입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살표를 따라 '요구·지지의 투입 → 정책 결정 → 정책 집행이라는 산출 → 결과와 반응의 환류'로 구분한다. 시민과 집단의 요구는 투입, 대안 선택은 정책 결정, 행정부의 집행은 산출, 집행 결과의 재반영은 환류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요구와 지지는 투입, 대안 선택은 결정, 행정부의 집행은 산출, 결과의 되돌아감은 환류이다.

NoteBase

18. 다음 자료의 두 정치 참여 집단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정당, 시민단체 중 하나이다)

> ○ 현대 민주주의 정치 과정의 핵심적 원리 중 하나는 다수의 상이한 A이/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는 것이다. 각 A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을 충원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며 선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쓴다.
>
> ○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며 시민들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자 현대 정치 과정의 새로운 주체로 B이/가 등장하였다. B은/는 선거 경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B이/가 추구하는 환경 보호가 선거 경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A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② B는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③ A와 B 모두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④ A와 B 모두 활동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A와 B 모두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목적·활동 방식·공통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 정당: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선거에 후보자를 내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치권력을 획득·유지하려 한다.
B 시민단체: 시민들이 공익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선거에 후보자를 내어 정권을 획득하기보다 여론 형성, 캠페인,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당과 시민단체는 모두 시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적 지식·태도를 형성하게 하므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A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한다’이다. A인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내고 정권 획득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법률을 집행하는 주체는 행정부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B는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이다. B인 시민단체는 환경 보호와 같은 공익을 추구하며, 특정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익집단의 특징이다.
③ O — 정당과 시민단체는 모두 시민의 정치 참여를 이끌고 정치적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하므로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A와 B 모두 활동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이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시민단체는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이 아니다.
⑤ X — 틀린 표현은 ‘A와 B 모두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이다.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는 정당의 목적이며, 시민단체는 공익 실현과 정책 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

오답 포인트

시민단체를 이익집단과 혼동하거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정치권력의 획득으로 오해하기 쉽다. B의 ‘환경 보호’와 ‘선거 경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 시민단체임을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거에 후보자를 내고 정권 획득을 추구하면 정당, 특정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면 이익집단, 공익을 위해 여론 형성·감시·캠페인을 하면 시민단체로 구분한다. 이들 집단은 모두 정치 참여와 정치 사회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정치권력 획득과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은 정당의 특징이다.

암기 포인트

정당은 정권 획득, 시민단체는 공익 실현, 둘 다 정치 참여와 정치 사회화에 기여한다.

NoteBase

19. 다음은 실정법을 정리한 표이다. ㉠~㉤에 대한 예로 옳은 것은?

실정법의 분류	공적기관이 공공의 생활을 규율하는가?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가?
㉠	○	×	×
㉡	×	○	○
㉢	×	○	×
㉣	○	×	○
㉤	○	○	×

① ㉠의 예는 상법이다.

② ㉡의 예는 형법이다.

③ ㉢의 예는 행정법이다.

④ ㉣의 예는 민사소송법이다.

⑤ ㉤의 예는 실정법에서 찾을 수 없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실정법을 공법·사법, 실체법·절차법, 일반법·특별법으로 분류하고 각 법률의 성격을 표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공법은 국가나 공공 기관이 공적 생활을 규율하는 법이고, 사법은 개인 상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 자체를 정하고, 절차법은 그 권리·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정한다. 일반법은 사람·장소·사항에 널리 적용되고, 특별법은 특정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핵심 구분

표에서 ㄱ은 공법·절차법·특별법, ㄴ은 사법·실체법·일반법, ㄷ은 사법·실체법·특별법, ㄹ은 공법·절차법·일반법, ㅁ은 공법·실체법·특별법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공적 재판 절차를 규율하고, 권리·의무 자체가 아니라 그 실현 절차를 정하며, 민사소송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ㄹ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상법은 사인 간의 상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자 권리·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실체법이며,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ㄷ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ㄱ의 예는 상법이다.' 올바른 표현: '상법은 ㄷ의 예이다.'
② X —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과 범죄·형벌을 규율하므로 공법이자 실체법이다. 사법·실체법·일반법인 ㄴ의 대표적인 예는 민법이다. 틀린 표현: 'ㄴ의 예는 형법이다.' 올바른 표현: 'ㄴ의 예는 민법이다.'
③ X — 행정법은 행정 작용이라는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므로 공법에 속한다. 사법·실체법·특별법인 ㄷ의 대표적인 예는 상법이다. 틀린 표현: 'ㄷ의 예는 행정법이다.' 올바른 표현: 'ㄷ의 예는 상법이다.'
④ O —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담당하는 민사재판 절차를 규율하는 공법·절차법이고, 민사소송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ㄹ에 해당한다.
⑤ X — ㅁ과 같은 공법·실체법·특별법은 실정법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라는 특정 범위의 공적 법률관계에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율한다. 틀린 표현: 'ㅁ의 예는 실정법에서 찾을 수 없다.' 올바른 표현: 'ㅁ의 예는 실정법에서 찾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상법을 공법으로 보거나 민사소송법을 사법으로 보는 혼동이 핵심 함정이다. 법의 이름에 '민사'가 들어가더라도 민사소송법은 개인 간 생활관계 자체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법원의 재판 절차를 규율하므로 공법이자 절차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규율 관계가 공적 생활인지 사적 생활인지로 공법·사법을 가른다. 다음으로 권리·의무의 내용이면 실체법, 그 실현 과정이면 절차법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가 넓으면 일반법, 특정 사람·사항에 한정되면 특별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민법은 사법·실체법·일반법, 상법은 사법·실체법·특별법, 민사소송법은 공법·절차법·일반법이다.

NoteBase

20. 다음은 어떤 법의 제1조(목적)이다. 다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당 노동 행위 유형
② 임금 및 퇴직금 제도
③ 취업 규칙의 작성·신고
④ 근로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⑤ 해고의 예고와 부당 해고 등의 구제 신청 절차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제시된 목적조항을 통해 법률을 식별하고, 그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등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이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핵심 구분

제시문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과 노동쟁의의 예방·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이다. 이 법은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한다. 반면 임금·취업규칙·근로감독관·해고의 예고·부당해고 구제는 주로 「근로기준법」이 규율하고,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장은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제81조는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열거한다.
② X — 임금에 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운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율한다. 틀린 표현: '임금 및 퇴직금 제도'가 제시된 법의 규율 내용이라는 부분. 올바른 표현: 임금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율 내용이다.
③ X — 취업규칙의 작성·신고는 「근로기준법」 제93조가 규정한다. 틀린 표현: '취업 규칙의 작성·신고'가 제시된 법의 규율 내용이라는 부분. 올바른 표현: 취업규칙의 작성·신고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내용이다.
④ X —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직무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이 정한다. 틀린 표현: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가 제시된 법의 규율 내용이라는 부분. 올바른 표현: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직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내용이다.
⑤ X —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과 절차는 같은 법 제28조 이하가 규정한다. 틀린 표현: '해고의 예고와 부당 해고 등의 구제 신청 절차'가 제시된 법의 규율 내용이라는 부분. 올바른 표현: 해고의 예고와 부당해고 등의 구제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내용이다.

오답 포인트

제시문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만 보고 임금·퇴직금·취업규칙 같은 개별적 근로조건까지 이 법이 직접 규율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노동쟁의'가 법률을 식별하는 결정적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적조항에 노동3권, 노동조합,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이 나타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떠올린다. 임금, 근로시간, 해고, 취업규칙, 근로감독관처럼 개별 근로계약의 최저기준과 보호 절차가 중심이면 「근로기준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노동3권·노조·단체교섭·쟁의·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임금·취업규칙·해고·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이다.

NoteBase